

쌀이 점토로? 쌀 점토는 태극기로!

농촌진흥청, 광복절 맞아 우리 쌀 홍보 나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수원시 권선구의 유치원에서 40여 명의 어린이들과 쌀 점토로 태극기를 만드는 기념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 국민디자인단 '쌀의 팔팔(八八)한 변신, 미(米)라클' 팀에서 정부 혁신의 하나로 광

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쌀 소비도 늘리자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행사에 사용하는 점토는 쌀가루가 주원료이며, 식용 색소 등 화학 방부제를 넣지 않고 식재료로만 만든 안전한 제품이다. 쌀가루는 건식쌀가루용 '신길' 품종을 사용해 끈적임이 적고

부드러워 점토로 활용하기에 좋다. 15일 광복절에는 '대국민 쌀 점토 태극기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시민청 지하 1층 광복절 기념행사장에서 열리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진숙 수확후이용과장은 "이번 행사는 '쌀=밥', '쌀=떡'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쌀이 비식용 제품에도 활용된다는 다양성을 알리고자 마련했다"라며, "우리 쌀의 다양한 변신과 함께 소비를 확대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쌀 점토는 기술을 이전 받은 업체에서 생산·판매 중이다. 자세한 내용과 구입 관련 안내는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031-635-06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산업부, 60억 들여 조선기자재 기술개발·사업다각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60억원을 들여 조선산업 부품 기자재 업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 2019년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선산업 부품 기자재 업체에 대한 수요 연계형 기술개발과 사업다각화를 돕게 된다. 수요연계 사업과 기술개발의 경우 수요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제품생

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때 해당 기업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나 '입찰수주증빙'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은 조선산업이 밀집된 전북과 전남, 경남, 울산, 부산 등 5개 지역 조선분야 부품 기자재 업체이며 과제당 최대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공고 및 온라인 서류접수는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서류접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뉴스

'자발적 구매 동의서'나 '입찰수주증빙'을 함께 내면 우대받는다. 지원대상은 조선산업이 밀집된 전북과 전남, 경남, 울산, 부산 등 5개 지역 조선분야 부품 기자재 업체이며 과제당 최대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공고 및 온라인 서류접수는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서류접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뉴스

제출된 서류는 점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서류심사와 응모기관의 사업계획 발표평가를 거쳐게 된다. 이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윤성혁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선부품 기자재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뉴스

“새롭고 밝은 전북우정 미래 개척”

제35대 정창립 전북지방우정청장 취임

제35대 정창립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정창립청장은 건국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임한 정 창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방송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방송관리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 전과정책기획과장 등을 두루 역임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뛰어난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이 나 있다. 정창립 청장은 “맛과 멋, 전통의 문화가 넘쳐나고 인심과 함께 어우러진 예술의 고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전북우정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 전북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협업중심, 고객중심 경영으로 전북우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특산물 판로개척 적극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전북우정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민간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정한 케셈 창업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 및 창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기안전공사, '케셈' 창업지원 협약식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민간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정한 케셈(KESM : Kesco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창업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 및 창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이범욱 기술이사와 7개 업체 대표

가 참석한 가운데 창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에 필요한 법·제도와 절차에 대해 공사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범욱 기술이사는 “민간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다각적인 창업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향후 2020년까지 전기안전관리분야에 250명 이상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성금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12일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광복회 전라북도지부(지부장 이강안)에 나라사랑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역사적인 해

에 맞는 8·15 광복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역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복회 전라북도지부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로 구성되어 독립운동정신을 유지·계승하는 단체로 전달된 성

금은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위한 의미 있는 곳에 쓰일 예정이다. 김장근 본부장은 “1945년 대한민국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감명을 주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국내 유일의 100% 민족자본은행으로서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세청, 금융거래분석TF 설치... 지능형 탈세 차단

국세청은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세정 전 분야의 면밀한 진단과 혁신을 위해 '국세행정혁신 추진단'도 설치한다.

김현중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TF를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 지원·연구 등을 추진한다. TF는 서울청 산하조직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만들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금융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간 거래 중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다”며 “기업이 수익을 의도적으로 줄여 국외로 이전하는 (탈세) 가능성을 연구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용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을 정밀 점검한다.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상황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액 금융 자산·부동산 보유 연소

자에 대한 자금출처 등도 통합 분석할 방침이다.

국내의 정보교조를 강화해 국내 매출액을 축소신고 하면서 상시 파악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에 매출액을 은닉하는 반산형 기업 등의 역외 탈세 혐의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감치명령 제도 도입 등 악의적 체납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외부감독을 늘리기로 했다.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위해 세무조사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앞서 국세청은 위법·부당 세무조사 등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도 신설한다. 이는 3회 이상 반복되는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해주는 제도다.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세자 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권한 법적화도 추진한다.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전문가를 2022년까지 38명(30.4%) 확충해 납세자 보호인력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뉴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